

민주당 “수사·기소 완전 분리” vs 국힘 “범죄 대응 약화”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격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함께 심사
민주,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27일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앞서 상정돼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들과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를 진행하다보면 별도로 검찰안이 있는 것 같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운 민주당 의원도 “과

거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저항을 많이 했다.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 그 밑에 고위직 검사들도 ‘사퇴 쇼’를 한다. 그리고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써서 시끄럽게 만들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된다”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여론을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검찰 개혁을 반대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에 계셨어서 알겠지만, 검찰에서 여러 파동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이 직접수사권, 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많은 논의가 검찰 내부에 있었지만 검사들도 수긍을 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큰 흐름에 있어선 (검사들도)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노인 학대, 아동 학대)의 경우 개별법을 통해 송치가 가능하도록 한 민주당 당론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송치되는 사건 중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보이 스토킹 같은 경제범죄는 수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부분이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당론안 중 송치 가능한 범죄를 한정한 것이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7대 범죄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그 죄명에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이스 피싱, 뇌물 받은 정치인, 마약 사건, 간첩 사건 등을 왜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나”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저도 주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인 보이 스토킹 다단계 사건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여야 의원들이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여야에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건도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대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결’

특정 당대표 후보 지지하며 세력 형성
팀김민석, 전체 투표율 높이는 전략
팀정청래, 충성 지지층 결집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가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과 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로 나뉘어 세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체 투표율을 높여 유리한 고지를 잡하려는 ‘팀김민석’과 자신의 충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팀정청래’ 간 선거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진출했고, 최고위원 선거는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운·박선원·임미애 후보가 본선에 올랐다.

이 가운데 김용·김영호·서미화·박선원·임미애 후보는 천명(천이재명)계를 대리한다고 알려진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지

지하고, 최민희·한민수·이성운 후보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지지를 일찍이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각자 나눠 당 대표 후보들의 당원 간담회나 강연에 모습을 함께 드러내는 등 팀 대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천청(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예비경선에서 모두 살아남아 지지층의 결집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팀김민석’은 전체 투표율 높이기엔 집중하고 있다. 권리당원의 표심이 대거 반영되는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천명 당원과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당원들도 포섭해 투표율을 끌어 올려야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원 100% 투표 운동으로 당원 주권을 살리고 새 지도부의 통통성을 강화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투표 독려 운동을 진행하는 가

운데, ‘천명 4+1 투표전략’으로 최대한 많은 ‘팀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당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카페인 ‘재명아네 마을’엔 당 대표 표를 김민석 후보에게 몰아준다고 동시에 최고위원 표는 홀수달 생일인 당원은 박선원·서미화 후보에, 짝수달 생일인 당원은 김용·김영호 후보에 표를 줘야 한다는 전략 공유되고 있다. 임미애 후보는 순회 경선 막판 서울에서 표를 몰아주고 TK(대구·경북) 5% 지역별 기중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팀정청래 측은, ‘집토끼’ 잡기에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심하지 마라.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면서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1표의 무기가 있으니까”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YTN라



김용 후보



김영호 후보



서미화 후보



박선원 후보



임미애 후보

(위쪽)천명(천이재명)계를 대리한다고 알려진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
(아래쪽)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

/국회



최민희 후보



한민수 후보



이성운 후보

디오에 출연해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경선에서 제대로 반영된 이후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예비경선에서 최종 투표율은 37.44%였고 천청계 예비후보들은 모두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청래 후보의 개혁 당 대표' 구호에 동의하는 당원들을 끌어모으면 본선에서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선거인단은 대의원 1만7677명, 권리당원 152만7261명이다. 민주당은 30일까지 총청권역에서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진행한다. 이번 선거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같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70%, 국민여론조사가 30% 반영된다. 당 대표 후보자는 1~3순위까지 순위를 투표하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되고 최고위원 선거는 1인당 후보 2명에게 투표한다.

/박태홍 기자

보유세 개편안 임박… 靑 “핀셋형 대출 지원 검토”

“주택 공급 확대 우선”

청와대가 이른바 ‘뽕뽕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살펴보는 기초”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2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셋값과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등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커진 부분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다 대출을 해드리면 집값이 오른다”며 “우리가 못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규제로 대출이) 안 된

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이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은 보유세 강화 기초가 맞느냐는 질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30억원’이 보유세 중과 기준이 될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 기자 syj@

정성호, 사의설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법무부장관)

靑 “공식 사의 표명 확인된 바 없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이 27일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밖”이라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 원칙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점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큰 틀의 검찰개혁이 완료됐으니 김민석 전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 이전부터 사퇴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